

노란봉투법 첫 시험대... CU 사태, 원청 책임론으로 확산

m-커버스토리

‘실질 사용자’ 판단 쟁점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질적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대형 시험대가 됐기 때문이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거진 대표적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

BGF리테일 지배력 인정 여부 쟁점 정부, 직접 교섭 필요성 이례적 언급 계약 당사자 아니라는 논리 흔들 사용자성 확대 기준 놓고 논란 가열

지난 20일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채 수송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이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했다. 차주들은 하루 13~14시간의 고강도 노동에도 월 순소득이 320만 원 수준에 그치는 현실과,



25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 ‘열사정신 계승! CU 투쟁승리!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50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휴식을 위해 대리 기사를 쓸 경우 하루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노동’ 구조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외형은 CU라는 특정 기업의 노사 문제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용자 정의의 확대’라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는 원청-자회사-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

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원청의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BGF리테일 역시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가장 과격적인 메시지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노란봉투법 자체보다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BGF리테일을 ‘실질적 원청’으로 명확히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진행자의 “이 사건 원청이 BGF리테일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운송 기사들이 거기(원청)와 직접 교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수장이 특정 기업을 지목해 교섭 의무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편의점 가맹점주나 화물 노동자가 형식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매뉴얼과 물량 배정에 종속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편의점주가 시·종업 시간을 결정할 수 없고 매장 물건도 본사가 정해준 대로 한다면, 실질에서는 종속돼 있으므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례적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사용자 범위의 무한 확장’이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승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참사”라며 BGF리테일의 사용자성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지의 죽음은 자본의 폭주와 공권력의 비호 속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와 운송료 현실화와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와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도미노 파장’에 긴장하고 있다. 대다수 유통 대기업이 물류 자회사를 통한 위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BGF리테일이 교섭에 응하는 선

례를 남길 경우 유사한 요구가 전 산업 계로 확산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롯데·현대백화점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점 브랜드 직원들과 단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입점 브랜드 직원이라 할지라도 원청인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이번 CU 사태에서 제기된 원청 책임론과 궤를 같이한다.

다단계 위탁 구조 책임론 수면 위로 백화점·면세점 교섭 판단과 맞물려 노동계, 운송료 현실화·처우개선 요구 산업계, 원청 교섭 선례 확산에 긴장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계약서상 명시된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 전반에 원청의 통제가 개입된다면 향후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적 교섭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가처분 취하와 성실 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보험계약마진 늘었지만 순익 30% 급감... 보험사 ‘이익 전환력’ 부각

CSM 확대에도 당기순익은 악화 손해율·투자손익 등 단기 변수 영향 금융지주 보험계열 합산 순익 4507억 비은행 실적 주도권은 증권사로 이동

금융지주 보험계열사들이 올해 1분기 미래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고도 당기순이익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 보험사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CSM 규모에서 실제 이익 전환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 KB라이프,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금융지주 보험계열 5곳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단순 합산 45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511억원과 비교하면 30.8%(2004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보험계열사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외형 축소와는 결이 다르다. CSM 지표가 확인되는 주요 보험계열사들은 미래이익 기반을 늘렸지만, 당기순익은 손해율과 투자손익, 예실차 등 단기 변수에 흔들렸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인식할 미실현 이익을 의미한다. 다만 CSM이 늘었다고 당장 당기순이익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CSM은 장기간에 걸



KB손해보험.

쳐 보험손익으로 상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분기 실적은 손해율, 예실차, 금리 변동, 유가증권 운용손익, 보험금융비용 등에 바로 영향을 받는다.

◆ CSM은 증가... 순익은 감소

KB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순이익 20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0% 감소했다. 반면 CSM은 9조4776억원으로 같은 기간 6.2% 증가했다. 장기보험 CSM 상각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투자손익도 줄면서 전체 순이익이 감소했다.

KB라이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분기 순이익은 798억원으로 전년 동기



신한라이프.

대비 8.2% 줄었지만 CSM은 3조4408억원으로 15.1% 증가했다. 신계약 CSM 유입으로 장기 수익 기반은 개선됐지만 보험영업손익과 투자영업손익이 모두 줄면서 당기순이익은 뒷걸음질했다.

신한라이프는 순이익 감소폭이 더 컸다. 신한라이프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0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는 부진의 배경으로 예실차 손실 확대와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한 금융손익 감소를 제시했다. 다만 CSM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2% 증가했다.

NH농협금융보험계열사 실적은 엇갈렸다. NH농협생명의 1분기 순이익은



NH농협손해보험.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651억원보다 58.2% 감소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399억원의 순이익을 거둬 전년 동기 204억원보다 95.6% 증가했다. 전년도 영남권 산발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계약 확대가 반동 요인으로 작용했다. NH농협손보의 기말 CSM도 1조667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5% 늘었다.

◆ 비은행 주도권, 보험보다 증권

금융지주 내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보험사는 은행 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핵심 비은행 축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권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계열사가 비은행 실적을 주도했다.

KB금융은 1분기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43%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KB증권의 순이익은 3478억원으로 KB손보 2007억원, KB라이프 798억원을 웃돌았다. KB금융 전체 순이익 증가 요인에서도 순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파생·외화환산손익의 증가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보험영업손익 감소는 감익 요인으로 반영됐다.

신한금융도 자본시장 부문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신한금융의 자본시장 부문 순이익은 3232억원으로 보험업 부문 순이익 935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신한투자증권 순이익만 2884억원으로 신한라이프 순이익(1031억원)의 2배를 넘었다. 그룹 전체로는 비이자이익이 9393억원에서 1조1882억원으로 늘었지만, 보험업 순이익은 1606억원에서 935억원으로 줄었다.

NH농협금융에서는 이 흐름이 더 선명하다. NH농협금융의 비이자이익은 5971억원에서 9036억원으로 51.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순이익은 2082억원에서 4757억원으로 128.5% 늘었고, NH-Amundi자산운용도 8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17.5% 증가했다. 반면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보의 합산 순이익은 855억원에서 671억원으로 감소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metro